지역 정치권 "행정통합 신속 추진해야" 한목소리

호남특위 위원들 "특별법 2월 통과를"
권한·재정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강조
조국혁신당 "초당적 협의체 구성해야"
진보당, '광주·전남·전북 대통합' 제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전남 위원들의 광주·전남 통합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려 이병훈 상임수석부위원장, 양부남 부위원장, 김성 수석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신속한 통합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전남 위원 일동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 없이는 지역의 생존도, 미래도 없다"며 "특별법안이 2월 중 조기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인 만큼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나머지 세부 사항은 단서조항을 둬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통합은 수도권 집중을 배제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고속도로"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권한과 재정 측면에서 분명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해 광주·전남의 핵심 전략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세 비율 인상,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R&D 세액공제 확대, 투자 인센티브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전남도당도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국가적 생존 해법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한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행정통합과 동시에 시·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고속주행할 수 있도록 치밀한 구조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분권 구도의 근본적 전환 ▲산업 구도의 전환 ▲생활권역 구도의 전환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재정 권한 없는 책임, 실질적 권한 이양 없는 명칭 변경은 공회전에 불과하다"며 "광주·전남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해상풍력·재생에너지 연계 소부장 산업을 결합한 종합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상을 5극 3특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혁신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민주당만의 통합 논의가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진보당 호남 3개 시·도당 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전북을 포괄하는 '500만 호남 대통합 특별시' 추진을 요구했다.

김재연 대표와 전종덕 국회의원,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 김선동 전남지사 후보,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등 진보당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당 위원장은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헌신했지만 여전히 차별과 배제, 인구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제 호남이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중심축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500만 호남 대통합 특별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용인 반도체 산단 호남 배치·피지컬AI 혁신벨트 구축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실질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은진 기자

시·도, 행정통합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

상시 의견 수렴·정보 공개·질의응답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 통합 관련 온라인 소통창구를 각각 개설하고 상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광주시·전남도는 8일 '광주·전남 대통합 소통 플랫폼'을 갖추고 각각 운영을 시작했다.

플랫폼은 광주시·전남도 누리집 첫 화면 알림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온라인 소통창구다.

플랫폼은 ▲행정 통합 추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자료실 ▲시·도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주요 Q&A ▲시·도민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질의응답 게시판 등 3개 메뉴로 구성했다.

광주시·전남도는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 시·도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해 행정 통합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도민 질문에는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소통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간·장소의 제약이 따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오프라인 소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온라인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창구로 운영된다.

플랫폼은 행정 통합이 확정될 때까지 전용 웹·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시·도 누리집 공지 게시를 시작으로 시·군·구,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활용해 소통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도민과의 직접적인 현장 소통을 위해 1-2월 중에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권역별 22개 시·군 대상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행정 통합 추진 배경과 추진 방안,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광주시장 출마' 문인 북구청장 사퇴 철회 논란

정달성·문상필 "주민 기만" 강력 비판
문 청장 "통합 논의 공백 우려" 해명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입장을 밝혔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퇴임식을 하루 앞두고 이를 돌연 철회하자, 북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북구에 따르면 문 청장은 전날 북구의회에 사임 철회 통지서를 제출했다.

문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개인의 거취보다 공동 과제인 시·도 통합 추진에 매진하기 위해 사임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청장은 "구청장의 공백은 자칫 구민의 목소리를 소외시키고 지역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북구의 역할과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문 청장은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8일 자로 사임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30일 북구의회에 사임 통지서를 제출해 수리된 상태였다.

8일 퇴임식을 개최한 뒤 오는 18일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사퇴 하루 전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달성 북구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사임 철회는 단순한 판단 변경이 아니라 주민 신뢰의 문제"라며 "주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북구청장 자리는 개인의 정치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도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출마를 위해 북구를 떠나려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구민을 찾는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의원은 "사퇴 철회는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 끝에 나온 비겁한 회군"이라며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고 북구의회는 이를 공식 수리했다. 그럼에도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은 공당과 의회, 42만 구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사임은 승인 사항이 아닌 통지 절차로, 철회 의사가 접수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문 청장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통합 논의에 집중한 뒤 향후 행보를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변은진·윤찬웅 기자